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1995. 12.

安 仁 海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序 文

탈냉전기에 남한의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성립된 반면, 북한의 중국과의 혈맹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동맹간 진영화가 깨어지고 「불균형질서」가 형성되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진전됨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상호 교차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균형질서」가 형성되어 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 새로운 「균형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국가간 관계의 하나는 과거 혈맹 관계를 유지해 왔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는 혁명 1세대를 포함한 지도자집단의 사망으로 권력구조의 개편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정책 및 대내·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동북아 질서 재편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며, 북한은 중국과 일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한 외교전략은 장차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중국과 북한의 역할 및 중·북관계 변화를 증시하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중국과 북

한의 정세변화에 기초하여 탈냉전기 중·북관계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함께 등장할 새로운 통일환경하에서의 통일외교정책의 입안·수행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要 約

탈냉전기에 한·중수교로 인해 형성된 동북아에서의 「불균형질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계기로 남북한에 대한 주변4국의 상호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균형질서」로 변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이루게 될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북관계의 변화과정을 동북아 질서변화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1. 동북아 질서 변화

동구 및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탈냉전기에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간의 혈맹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으며, 남한의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구소련을 양측으로 한 동맹간 진영화가 깨어지면서 「불균형질서」가 형성되었다. 그 후,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협상을 거치면서 북한과 미국 및 일본간

의 관계가 개선되어감에 따라 동북아는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상호 교차승인을 통한 「균형질서」를 지향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동북아 정세는 중·미관계 악화로 「패권적 갈등」을 겪게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 2. 중국의 동북아정책

탈냉전기 이후 중·북관계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방위적 평화공존에 입각한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며 이를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실리 위주의 경제외교로 경제협력의 증대를 추구해 왔다. 앞으로도 탈진영·탈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자주독립외교를 견지하려는 중국은 북한의 고립을 유발하거나 북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는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 한국과 중국은 상호 정상회담을 통하여 실리추구를 목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

중·북관계는 소원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동북아에서는 「불균형질서」가 형성·심화되었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변방지역 안보를 위해 변경국인 북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김정일 이외에는 북한체제에서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이 자국의 변경지역과 소수민족 관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은 체제유지, 안보확립 및 경제난국 타개 등에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김정일 정권의 중·장기적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을 유보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인민들의 불만이 증폭된다면 내부모순으로 인하여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으며, 체제공고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이 북한이라는 군사긴장유발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가 이루어지는 「균형질서」로의 전환을 상정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미래질서 개편에 대해 중국은 미국을 축으로 한 「단일지배체제」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조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향후 동북아 질서 개편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려는 중국은 반미패권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북한카드의 효용성을 감소시키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和平演變)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미관계가 패권적 갈등을 겪으며 악화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에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남한으로서는 오히려 중·미 양국에 대해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중·미간 중재자 역할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으로서는 중·미 양국의 상호 견제 심리를 지렛대로 카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과 미국간의 동북아 질서 재편을 둘러싼 패권적 갈등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를 교차승인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한반도에서의 균형질서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권 붕괴로 인하여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용적 필요에 따라 중국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국(미국, 일본 등)을 이용하여 협상수

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보호를 확신할 수 없게 된 북한은 대미관계에서도 제3국(중국 등)을 카드로 해서 협상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균형질서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대외관계개선보다 체제공고화를 추구하던 북한의 전략이 체제공고화를 위한 대외관계개선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 3. 중국 및 북한의 정세

현재 중국과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권교체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 국내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며, 이는 중국 모델을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여려는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鄧小平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①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 가능성과 간부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② 부패척결을 기치로 권력투쟁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치 안정화정책이 시급하며, ③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로 인하여 민심동요와 사회불안이 확대되면서, ④ 중앙·지방간의 발전전략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江澤民 후계체제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세대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江澤民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 의지에 따른 정치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과 지방, 연안과 내륙 및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조정이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체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외관계, 사회문제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① 김정일 정권은 「유훈통치」를 통하여 자신의 승계를 정당화하면서, ② 완충기 경제전략으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식량난 및 물자난을 타개하고자 한다. 승계체제가 안정된 후, 김정일 정권은 ③ 경제위기 극복을 담당할 관료체제를 조직하기 위해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이고, ④ 경제력 회복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것이다.

#### 4. 중·북한관계 전망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정세를 바탕으로 볼 때, 중·북관계는 네 가지 시나리오(① 긴장관계, ② 군사적 혈맹관계, ③ 선택적 유대관계, ④ 우호적 변방관계)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향후 중·북관계는 상호 반목으로 인한 긴장관계, 혹은 동맹권 부활로 인한 과거의 군사적 혈맹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불균형질서」가 심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중·북관계는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중국형 개혁·개방 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선택적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주도권 확보전략의 주요 수단으로서 북한과 우호적 변방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두 시나리오의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서의 한국의 대러·대중 관계정상화로 인한 「불균형질서」에서 탈피하여, 탈냉전시대에서의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따라 미·중·일·러에 의한 남북 상호 교차승인으로 「균형질서」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 주변국의 동북아전략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각각 「남한의 이해」나 「북한의 이해」만을 고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거나 않은지 되돌아 보고, 장차 통일을 달성했을 때의 변영을 위한 「한반도의 이해」를 공통분모로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을 통하여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정학적 중요성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조건화하여 미국과 일본의 대북투자나 관계개선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원하고 교차승인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여 점진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영향력을 잃었다는 중국의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대한반도정책 견지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균형된 외교감각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북한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미온적 입장, 중·북동맹조약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한국을 아직

까지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이중성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과의 미흡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등한 입장의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目 次

第I章 序 論 .....	1
第II章 東北亞 질서 변화 .....	6
1. 불균형질서 형성 .....	8
2. 균형질서 모색 .....	16
3. 패권적 갈등관계 .....	30
第III章 1990년대의 中·北韓關係 .....	47
1. 중국의 동북아정책 .....	47
2. 中·北韓關係의 전개 .....	52
가. 소원기 .....	53
나. 화해기 .....	54
다. 견제적 협력기 .....	57
第IV章 中·北韓關係 전망 .....	66
1. 중국의 정세 .....	66
2. 북한의 정세 .....	73
3. 中·北韓關係 변화 전망: 시나리오 .....	82
가. 긴장관계 .....	83
나. 군사적 혈맹관계 .....	84
다. 선택적 유대관계 .....	85
라. 우호적 변방관계 .....	88
第V章 結 論 .....	93

<부록 I>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	99
<부록 II> 중·북한협정체결 .....	103
<부록 III> 한·중수교 이후 중·북한간 인사교류 현황 ..	105
<부록 IV>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 및 남한과 북한의 입장 .....	109
參考文獻 .....	112

## 第 I 章 序 論

동구 및 소련의 몰락과 함께 탈냉전기에 사회주의 중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유일한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간의 과거 혈맹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으며, 또한 동북아에서는 남한의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과거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동맹블럭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을 거쳐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감에 따라 동북아는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상호 교차승인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는 중·미관계 악화로 갈등을 겪게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이 유일한 세계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묵시적 이해 없이는 주요 관심사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sup>1)</sup>

---

1) 중국이 한반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행위자인 것은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조정과정(conflict-management process)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문제(world-order problem)와 세계질서해결(world-order solu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Samuel S. Kim, "China

그러나, 최근 인권 및 대만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의 갈등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초 이후 성립된 중·미관계는 현재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불편한 關係는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및 남한과의 관계를 중·미간의 역학관계에서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북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관계를 함께 조명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서는 내부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이러한 대립적 요소가 대외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대내요인과 대외요인을 함께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sup>3)</sup>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세 하에서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유발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는 구도 속에서 대한반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현존하

---

and the World in Theory and Practice,”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s, Co.: Westview Press, 1994), pp. 3~41.

2) 해리 하딩, 안인해 역, 「중국과 미국: 패권의 딜레마」 (서울: 나남출판, 1995) 참조.

3) Gerald Segal, “Deconstructing Foreign Relations,” David S. G. Goodman & Gerald Segal, eds., *China Deconstructs: Politics, Trade and Regionalis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5), pp. 322~55.

는 사회주의 국가 중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 및 체제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sup>4)</sup>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sup>5)</sup> 중국과 북한에서는 혁명세대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정책 변화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은 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6)</sup>

한편, 최근 중·북관계는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현실적응적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7)</sup> 중국은 경제적·실리적 이유에서 주변국과의 우호

4) 사회주의체제의 미래에 대한 비교 연구는 Howard J. Wiarda,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Sung Chul Yang, ed., *Democracy and Communism*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pp. 609~32 참조.

5) 체제 내구력과 관련 중국과 북한의 내부변화(change from within)에 대한 비교 연구는 Jan S. Prybyl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Socialist Countries," *Ibid.*, pp. 495~531 참조. 사회주의체제의 미래에 대한 비교 연구는 Wiarda,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pp. 609~32 참조.

6)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하에 아직까지도 법이나 기관에 의해서보다는 개인 지도자의 성향에 의해 지배되는 「인치사회」이다. 이런 점에서, 양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대내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Michael D. Swaine, *China: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5), p. 3.

7) 신념이나 인식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를 만드시 수반해 온 것이 아

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지정학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변경국인 북한의 변고가 중국의 변방, 특히 티벳, 신강과 내몽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표면적인 갈등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주도의 동북아 질서 재편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대서방관계에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권 붕괴로 인하여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적 통제의 강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용적 필요에 따라 중국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국(미국, 일본 등)을 이용하여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은 대미관계에서도 제3국(중국 등)을 카드로 해서 협상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를 전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동북아 질서 변화과정 및 중국의 대북한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1990년대 이후 중·북관계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중·북관계에

---

나라 오히려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정책변화는 종종 유발되어 왔다. Ernst Hass, "Collective Learning: Some Theoretical Speculations," in George W. Breslauer and Philip E. Tetlock, eds., *Learning in U.S. and Soviet Foreign Polic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pp. 62~99 참조.

영향을 미칠 중국과 북한의 정세를 점검해 본다.<sup>8)</sup> 이를 바탕으로 중·북관계의 예상 변화를 네 가지 시나리오 (① 긴장관계, ② 군사적 혈맹관계, ③ 선택적 유대관계, ④ 우호적 변방관계) 형태로 전망하고, 중·북관계의 변화가 향후 동북아에서의 「불균형질서」에서 「균형질서」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8) 안인해, “北韓의 情勢: 北·中關係를 中心으로,” 東アジア學會創立5周年記念大會(日本) 발표 논문, 1995.7.23 참조.

## 第II章 東北亞 질서 변화

중·북관계의 설정에는 동북아에서의 환경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 초의 국제정세 변화는 구소련 및 동구의 몰락으로 탈냉전하에 있던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기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북방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냉전시기의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가 와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은 중·미관계의 긴장과 맞물리면서 중·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반미패권」 전략은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며, 중·미관계는 밀월을 즐기는 협력관계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미회담 타결 이후 북·미관계개선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和平演變」시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구소련의 붕괴 이후 대소 견제세력으

9)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중국의 평화적 이행(peaceful revolution)을 원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로서의 중국의 가치가 소멸되었으며,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감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과의 무기판매 및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자 할 수도 있다.<sup>10)</sup> 현재 중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여기에 대만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된다면,<sup>11)</sup> 중국은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중·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친 동북아 정세요인

- 
- 10)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중국’ 노선에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서 미국이 중국내 지적 재산권 보호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6·4 천안문사태 6주년을 맞아 중국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것과 또한 연초 필리핀이 남사(南沙)군도 영유권 분쟁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어부 62명을 나포하여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등의 사태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이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중국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11) 미국은 대중국정책을 대폭 조정하여 향후 대만의 유엔 재가입 및 WTO 가입 지지, 미·대만간 주재대표기관 승격, 대만에 대한 독자적인 국가 승인 등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5.6.11.

으로 한·중수교로 인한 불균형질서 형성, 북·미회담을 통한 균형질서로의 이행, 중·미관계 악화로 인한 패권적 갈등관계 초래 등의 질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불균형질서 형성

### 가. 한·중수교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1992.8.24)를 통해 정치·경제·군사 등 전반적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sup>12)</sup> 중국은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감안하여, 楊尙昆 국가 주석(1992.4.13~17)과 楊白永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6.4)의 방북시에 김일성에게 한·중수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군사협력관계 지속을 약속하고 錢基琛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한·중간 경제협력, 일본의 정치·군사 역할 증대에 대한 견제, 대만의 국제적 고립 등을 목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중수교가 가지는 「불균형질서」로서의 의미와 향후

12) 한·중 국교정상화는 이상옥 외무장관의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북경회의 참가시(1995.4.8~17)에 李鵬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회동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균형질서」로의 이행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중수교 후 양국은 정상회담(1992.9.27~30)을 계기로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상호 교류확대를 위한 공식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sup>13)</sup>

첫째, 1993년에 이르러 한·중관계는 형식적 관계에서 실질적 우호관계로 전환되면서 정치협력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sup>14)</sup> 田紀雲 중국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의 방한(1993.6.6~12)으로 한·중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의 방한(5.26~28)과 한승주 외무장관의 訪中(10.27~30)<sup>15)</sup>에 이어 시애틀 정상회담(10.20)이 마련됨으로써 한·중 정치관계는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중국이 한국정부의 임정선열의 유해봉환요구를 받아들이고 중국 역사교과서 시정을 위한 한·중 전문가회의가

13) 중국은 우선 남북한의 핵보유 반대, 북한과의 핵협력 반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지속적 핵사찰 수용 권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등 4개 원칙을 천명하였다. 한국은 북한이 남북 상호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지원을 언급(1992.9.29)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자 하였다.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12.25), p. 44.

14) 한국과 중국은 각기 1993년 7월과 10월 上海와 부산에 총영사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정치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

15) 한·중 외무장관회의에서 瀋陽, 廣州, 靑島 등에 한국 총영사관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개최되기에 이르러, 양국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1994년의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3.26~30)과 李鵬 중국 총리의 방한(10.30~11.4)으로 이어져 최고 위지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기존의 경협중심의 협력단계에서 정치·안보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였다.<sup>17)</sup> 특히 양국은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안정문제, 미·북간 북핵문제의 타결로 제기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발전은 1995년에도 양국의 상호 최고위급 인사들이 교환방문<sup>18)</sup>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신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단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각자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

16) 1994년 4월 13일에 중국은 자국의 교과서에서 한국전 관련 북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17)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12.25), pp. 58~59.

18) 1995년 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4.17~22)으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전체제전환 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상호 입장교환이 있었다. 이어 한국의 이홍구 국무총리의 방중(5.9~15)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江澤民 주석(11.13~17)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1992년에 무역협정(2.1)과 투자보장협정(5.2)을 비정부차원에서 체결하였으며, 수교로 양국 경제관계가 공식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자 이를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켰다. 그의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경제무역기술공동위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시대를 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북경에서의 한·중 경제장관회담시(12.1~8) 상호 호혜국대우 지위 부여에 합의하고 항공협정과 이종과 세방지협정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교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힘입어 한·중간 교역규모는 1994년에 11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1995년에는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국의 하나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한국은 대중국교역에서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sup>19)</sup>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쌍무간 산업협력을 발전·제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향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지역화(regionalization)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

19) 투자 형태도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등의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적으로 EC 및 NAFTA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권이 재형성되고 있는 추세에 미루어 볼 때, 한·중 양국은 이 지역들에 대한 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계속 유효함을 밝히고,<sup>20)</sup> 한국전 참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sup>21)</sup>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1995년 陣健 외교부대변인이 同 조약이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1995.11.14)으로써,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급격한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배려를 재확인하였다.<sup>22)</sup>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안보적 위협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조치 경고에 대해 기권(1993.5.12)하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 등 당사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군관계 인사의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하고,<sup>23)</sup> 외교당국자

20) 외교부 대변인 성명, 1992.8.24.

21) 張庭延 주한 중국대사 언급, 1992.10.9.

22) 중국은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조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의 실무협약<sup>24)</sup>을 통한 상호 안보문제와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향후 신질서 구축을 위한 인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모색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한·중수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불균형질서를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미·대일 접촉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나. 한·중관계 강화

한국과 중국은 이제 탈진영, 탈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며 더욱 굳건한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江澤民 주석의 방한(1995.11.13~17)을 통하여 한·중관계는 정치·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당·정·군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신분으로 북한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江주석의 방한은 이미 黨對黨의 이데올로기 중시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리위주의 외교를 추구해 온 중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sup>25)</sup>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

23) 조성태 국방부 정책실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군 고위 지도부와 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1995.2.20~23).

24) 한·중 이주국장회의에서 논의되었다(1995.3.13).

25) 「서울신문」, 1995.11.17.

고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을 다지기 위해 산업시찰을 떠나면서 중국 주석은 양국의 眞性互惠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한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독립자주의교를 바탕으로 중국은 탈진영 및 탈이데올로기 정책을 표방한다. 江주석의 이번 방한으로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안보상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에 대한 경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양국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이사국으로서 한국과 중국이 세계무대에서도 북한의 핵문제 등에 대해 공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만큼,<sup>26)</sup>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균형된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한국과의 쌍무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APEC보다는 ASEAN과 같은 아·태지역 중소국과의 협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APEC에서 미국과 일본의 주도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과 보조를 맞추어 대응하려고 한다. 또한 環黃海 경제권의 일원인 중국은 역내에서 일본 다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

26)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대표를 맡게 되었다(1995.11).

협력을 핵심적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WTO에 가입하여 국제경제기구에서의 협력체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江澤民 주석은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대동하여 방한하였다.

셋째, 중국은 장차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를 단순한 양자적 차원에서 보다는 중·미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다자적 역학구조 속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일치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에게 침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27)</sup> 江澤民 주석이 오사카로 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의 과거지사에 대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의 다른 예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1994년 12월 정전위대표단을 철수할 때에는 김정일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지난 달 錢其琛 외교부장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

---

27) 김영삼 대통령과 江澤民 주석은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공동으로 촉구하였다(1995.11.14).

에서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현재 중·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급속한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미국의 주도로 동북아에서 신질서가 구축되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한국과의 공동보조를 맞추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포괄적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균형질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북아에서의 질서변화를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거나 중·미간의 긴장관계를 중재할 수도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다.

## 2. 균형질서 모색

### 가. 북·미회담

앞에서 살펴본 한·중수교로 인한 불균형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응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동북아에서의 균형질서를 모색하려는 노

---

28)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PEC회의에 미국대표로 참가한 고어 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중재노력에 감사한다고 언급하였다(1995.11).

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1994.7.8)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밖에 없었으나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 제3단계 2차 북·미회담에서 핵문제에 관한 합의(1994.10.21)를 이룰 수 있었다. 새로이 출범하는 김정일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핵문제해결을 바탕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중간선거(1994.11)와 1995년의 NPT 체결을 앞두고 북한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이러한 북한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수렴되어, 미국과 북한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외에 대한 남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3단계 2차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동북아 정세는 「균형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북·미간의 제네바 3단계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 및 북·일수교 추진 등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각의 교차승인이 완결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중국이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정치·안보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관계를 더욱 공식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4각의 교차승인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1년 7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 끝에 북·미간 합의를 이루게 됨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북·미간의 포괄적 합의는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원자력 기구, 미국 및 한국을 대북협상의 실질적인 상대역으로 등장시켰기 때문에, 향후 탈냉전시대 동북아 질서 재편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대한반도 정책 방향의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북·미합의는 대북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과 북·미관계 개선을 대가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궁극적인 핵주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동참시킬 수 있는 장을 열어 놓았다. 북·미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은 핵개발 동결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대미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주장한 남북대화 재개 및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시한과 방법이 북한의 거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한과의 대화에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의 연계를 원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 정부가

북한 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던 「先투명성 확보, 後 경수로 지원」이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한·미 공조체제의 한계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간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핵보호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관철시켰다.<sup>29)</sup>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핵문제의 완전해결이 담보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향후 협상카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과 함께 합의사항의 이행을 감시할 감독기관이나 제재장치의 기여로 합의사항의 실천여부가 북한의 이행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북아에서의 탈냉전 추세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북·미회담에 임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북한이 어느 정도 성실한 이행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 ① 북한의 입장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난을 극

---

29) 예를 들면, 북한의 과거핵규명을 위한 IAEA 특별사찰의 시기를 3~5년간 연장하였고, 경수로가 완전히 제공될 때까지 폐연료봉을 북한 내에 건식 보관하며 흑연감속로의 폐기시한이 불투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북하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체제유지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핵무기 개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첫째,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한국과의 군비경쟁에는 한계가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보호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카드를 북한내부의 결속력 제고와 체제공고화에 이용해 왔으나,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오히려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자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은 힘의 우위과시를 주장하는 국방성과 대화해결을 원하는 국무성의 부처간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관료제하의 정책대립으로 인식하여 비난하였다. 한편 북한은 북·일수교를 먼저 원하였으나 미국과의 핵협상 없이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둘러싼 북한의 정책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30)</sup> 이것은 곧 대외관계개선보다 체제공고화를 추구하던 북한의 전략이 체제공고화를 위한 대외관계

---

30) Alexander Y. Mansourov, "North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Berkeley, California: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1994).

개선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sup>31)</sup>

셋째, 북한은 핵카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모호성을 증대시켜 보다 많은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의 핵무기 전략으로 실질적인 미국과의 직접대화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경수로 지원을 포함하는 경협과 단계적인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핵문제 협상과정을 볼 때 북한은 남한을 소외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8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다자간 회의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sup>32)</sup>는 이유로 북·미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을 고집하여 왔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추모기간을 지내는 동안 김정일의 대외업적을 쌓는 의미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 ② 미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도 호전적이며 극단적 전체주의국가인 북한이 동북아 안정에 위협을 주

31) Yinhay Ahn, "PRC-DPRK Relations and the Nuclear Issue,"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p. 191.

32)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994.4.1.

는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리하고자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전성의 확보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유지를 위한 불확실성의 조기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무조건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극구 거부감을 보이는 사항, 즉, 남북한 특사교환 전제 및 남북대화 병행 문제 등에 대하여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것은 다른 대안(surgical strike, 경제제재 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국내문제, 즉 1994년 11월의 중간선거 및 1995년의 NPT체제 유지를 위한 외교력 입증 등의 명분 축적을 위한 촉박한 일정으로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를 북측에 내어주고 소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미국은 그동안 갈루치 핵대사를 비롯한 다양하고 잦은 접촉 창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남한을 통하여 북한을 인식하던 협상전략에서 탈피, 독자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 및 행태를

33) 미국의 협상대표들은 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북한이 극구 거부하는 사항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과 ② 미국은 중간선거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tangible results)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핵협상 대표인 갈루치(Robert Gallucci)와의 면담, 1994.10.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식 일괄타결과 유사한 형태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북한 특별사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사찰 대상 및 방법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sup>34)</sup>

또한 미국은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의 특사교환제의(1993.5.25)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여 북·미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게 되자, 거꾸로 북한측의 거부자세를 감안하여 북·미 3단계 회담의 조기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남북 대화재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일관된 정책 자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미협상 합의문에서 미국은 남북대화선행을 명문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북한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남북대화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묵과하였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전반적인 협상 결과를 볼 때 미국은 국내적으로 1994년 11월

---

34)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에서 신고시설에 대한 임시·일반사찰로 제한되고, 나아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로 축소 조정되었다. 또한 북한이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를 통보한 후에 폐연료봉의 샘플을 채취하겠다는 주장으로부터 폐연료봉의 분리·보관 이후 적정 시점에 샘플을 채취 및 분석한다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

의 중간선거를 겨냥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에 따라 1995년에 예정되어 있는 NPT체제 연장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NPT복귀와 과거 핵투명성 보장의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될 경우 앞으로 북·미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sup>35)</sup>

### ③ 북·미회담 진전 상황

북·미간의 기본합의문 이행은 일단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북한은 5MW 원자로의 활동을 동결하고 50MW, 200MW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1994.11.1)하였고, IAEA의 사찰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국은 기본합의문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다루기 위해 폐연료봉, 경수로, 연락사무소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sup>36)</sup>

북·미간에 폐연료봉의 건식보관이 합의(1995.1.18)됨에 따라

35) 한국계 미국하원 재선의원 김창준 인터뷰, 1994.11. 그의 *Time International*, November 21, 1994 참조.

36) 미국 핵전문가들이 1994년 11월 12~19일 평양을 방문하여 폐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북경에서는 11월 30일 경수로제공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1월 21일까지 실천하기로 되어있는 의무사항 실행을 위해 중유 1차분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하였다.<sup>37)</sup>

또한 미국무부는 통신, 정보, 금융거래, 교역 등 4개 부문에 걸쳐 제1단계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1995.1.20)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북·미관계 진전에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에 공급될 경수로 문제를 전담하게 될 기구로서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발족되었다. KEDO 설립협정은 북한에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KEDO는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북·미 핵합의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제공, 사용후 연료봉의 보관과 3국 이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5MW 원자

---

37) 1995년 미국은 북한에 15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1월 5만톤, 8월 4만톤, 9월 3만톤, 11월 3만톤을 제공하였다. 금년분에 대한 재정부담은 클린턴 정권이 기존의 국방예산에서 전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러한 예산 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로,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이 중단된 50MW와 200MW 흑연원자로 등 핵시설의 해체를 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트로이 목마'라고까지 표현하는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수용이 북한에 의해 완강히 거부됨으로써, KEDO와 북한간의 협상은 제네바합의문의 공급협정체결 시한(1995.4.21)을 넘기고 말았다. 사실, 한국형 경수호가 북한에 제공된다면 건설과정에서 남한기술자들이 북한에 상주하게 되고 남한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등 북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태의 진전으로 인하여 북한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북한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라롬푸르에서 개최된 북·미 준고위급회담(1995.6.13)에서 경수로 노형, 계약구조, 부대시설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문은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채 대강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수로사업의 세부사항은 북한과 KEDO가 협의토록 규정<sup>38)</sup>한 상태에서 북·미간 직접협상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KEDO의 위임을 받은 미국이 협상대표로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sup>39)</sup> 제1차 회담(9.11~13)에서 새로

38) 콜라롬푸르에서의 합의문에 북한에 제공될 경수호가 한국 표준형 원자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KEDO의 설립협정에는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39) KEDO의 경수로부지 조사단(미 전문가 2명과 한·일전문가 각각 4명

운 조건<sup>40)</sup>을 내세웠던 북한은 뉴욕에서의 제2차 협상(10.16)에서 공급범위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KEDO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여 경수로 지원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으며, 그 결과 협상은 1995년 12월 15일에 타결되었다.<sup>41)</sup>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북·미간의 협의가 와싱턴에서 곧바로 개최(1994.12)되었으나, 협의는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

---

등 10명으로 구성)이 1995.8.15~22까지 함경남도 신포지역을 방문하였다. 경수로부지 조사단은 북한의 신포지역은 해변에서 3km 정도 떨어져 한국형 경수로의 입지조건과 다소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이 짧아 부지타당성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40) 북한은 상환조건을 무상건설로 요구하는 한편, 송배전시설, 3개의 변전소 시설, 도로 항만 등 발전소 주변의 기간시설 확충 등 10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부대시설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 41) 브라운(David Brown) 한국과장은 KEDO 협상이 순조롭다고 언급(1995.11.20)하였는데 미국은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 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한국은 통일관련 장관 회의에서 승인했다(1995.12.13). 북한은 “시작에서 끝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종국적으로는 KEDO측은 경수로 원전건설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 부담하고, 북측은 시운전 전력 등에 대해서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통일원 교육홍보국, 『統一速報』(1995.12.23) 참조.

다. 북한과 미국은 임시 영사보호권 부여에 합의(1995.9.25)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이 북한내 미국인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행사하게 되며, 주유엔 미국대표부가 미국내 북한인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 대표, 인원규모, 업무 범위 및 사무실 부지 문제 등 영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외교 행낭 운영문제 등 여타 기술적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sup>42)</sup> 따라서 현재는 북한이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북·미연락사무소는 1996년 초에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 나.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이 북한의 고립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990년대 중국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의 발전경향이 저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외교적으

---

42) 미국은 외교행낭 및 필요한 물자의 반출입을 판문점과 남포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북한은 판문점 통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로 역내에서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제발전을 통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은 주변국과 이념 및 체제상의 상이성보다는 공통이익 존재여부에 따라 대외관계를 추진해 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sup>43)</sup>

북·미회담의 성공적인 타결은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해 주고 있다. 북·미회담 타결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지원에 의해 달성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은 대북한정책에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sup>44)</sup>

그러나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에 경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개혁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나아가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실리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43) 안인해, “북·미관계개선과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國際政治論叢』, 제34집 2호 (1994), pp. 275~91.

44) 중국은 제네바합의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KEDO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 패권적 갈등관계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동북아 패권<sup>45)</sup>전략 하에서 중·미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 가. 중·미관계 악화

최근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鄧小平의 건강 악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대미 온건입장을 견지해 온 鄧小平의 노선이 중국지도부의 강경분위기에 휩쓸려 실종되어 버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鄧小平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상호협력력을 주요골자로 피력한 「16字 方針」을 대미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미관계와 미국에 대한 강경일변도 자세는 그만큼 鄧小平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정권교체기에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득세했음을

45) '패권'은 냉전기에는 주로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었으나, 탈냉전기 및 향후 21세기에는 그외에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환경, 문화적 측면 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패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양국의 갈등요인으로서 대만 및 인권문제, 핵실험 및 무기판매, 지적 소유권 문제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① 대만문제

최근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불신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1994년 말 미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대만에 대한 동정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李登輝 대만 총통의 사적인 미국방문을 허용한다는 미국무부의 발표(1995.5.22)로 이어졌고, 중·미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수교(1979.1.1)시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입각해서 대만과는 경제·문화 등 비공식적 관계에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대만의 민주화 노력을 평가하고 미·대만간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고려를 바탕으로 타이완 문제를 대중국 견제카드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이 외교부의 항의 성명(1995.5.23)에 이어<sup>46)</sup> 주미국 중국대사를 소환하

46) 訪美중인 于振武 공군사령관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1995.5.22)하고, 李貴鮮 국무위원과 遲浩田 국방부장의 미국 방문이 취소되었다.

고, 로이 미국 대사가 이임함에 따라 양국은 상호 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李登輝 총통의 방미(1995.6.7~12)에 이어 미·대만간의 경제차관급회의의 정례화가 합의(1995.6.23)되고 대만의 유엔가입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sup>47)</sup>되자,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7.21~26, 8.15~25)하는 등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가 대만통일과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중국인의 민족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sup>48)</sup>는 것으로, 중국은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의 부당한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인권문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인권 및 통상 연계정책과 일본과 EU 등 서방의 여러 국가들과 제휴하여 인권개선을 통한 중국의 개방과 민주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지난 천안문사태 이후에

47) 미의회 상원의교위원회 통과(1995.6.7). 그 외에도 외국원조법안이 미의회 하원에서 통과(1995.6.8)되고, 대만 관리의 미국 사적 방문이 허용되었다.

48) 예를 들면 江澤民 주석의 毛澤東 탄생 100주년 기념식 연설 참조. 연설문은 중국이 독립, 통일, 민주와 민족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해 왔으며 패권정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人民日報』, 1993.12.27.

UN의 대중국 인권 규탄 결의안을 주도한 이래,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여지의 석방문제, 양심수 석방, 죄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미국내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해 오고 있다.

미국무부는 인권보고서(1995.2.1)에서 중국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유엔 인권위에서 중국의 인권유린 사태를 규탄하는 결의안(3.8)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오히려 재미 인권운동가인 해리 우를 체포(6.19)하고 간첩혐의로 구속(7.8)함에 따라, 미의회는 미행정부가 중국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up>49)</sup>을 통과시키는 등의 대중국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중국이 해리 우를 석방(8.24)함으로써 미국은 힐러리를 단장으로 北京 세계여성대회에 대표를 참가시키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인권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여전히 중·미간의 주요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인권문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팔목할 만한 개선에 대해서는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내세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sup>50)</sup>

49) 미하원에서 중국의 인권상황 감시 요구 법안이 통과되었다(1995.7.20).

50) 「人民日報」, 1994.3.17과 1994.5.29 참조; Lincoln Kaye, “No Stop to Uncle Sam: Beijing Gives a Frosty Reception to Christoph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4, 1994, pp. 18~19; “China 1, America 0,” *The Economist*, March 19, 1994, pp. 33~32; Marguerite Johnson, “Good Cop, Bad Cop: A Crackdown on Dissidents Creates a Human Rights Uproar on the Eve of

### ③ 중국 핵실험 및 무기 수출

미국은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제3세계 협력을 명분으로 대이란 원전(300MW 급 2기, 12억 달러) 공급 및 대이란·파키스탄 미사일 판매를 추진해 왔다. 또한 중국은 NPT체제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1995.5.12)한 직후 지하핵실험(5.15, 8.17)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미사일기술통제 및 원자력협력에 관한 협상을 연기한다는 통보(5.28)로 미국을 실망하게 하였다.<sup>51)</sup>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역내에 불안울 조성하고 「미사일통제체제」(MTCR) 약속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경고하면서 아울러 대이란 원전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판매사실이 확인될 때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시사하였다(1995.7.10).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방부는 올해 초 「아태전략보고서」(2.27)를 발간하여 2000년대 초까지 동아시아에서의 전진배치전략을 고수(2.27)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미국과 베트남

---

Christopher's Visit," *Time International*, March 14, 1994.

51) 이에 대해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미국 방문이 취소되어 미·중간의 올해 상반기 군사교류는 감소되었다.

남 관계정상화(8.4)가 이루어지면서 북한-대만-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새로운 봉쇄망 형성설까지 제기되고 있다.<sup>52)</sup> 또한 미국의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차관보는 하원 아·태 소위원회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결국 장기적인 적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53)</sup> 비록 봉쇄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아니며 관계지속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관리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대일 안보유대 강화, 또한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해서 이미 대중 봉쇄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뉴욕 정상회담(10.24)에서 양국간의 군사교류 및 협력을 재개하기로 하여 상호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는 鄧小平 사후를 대비하여 미국의 국방성이 중국 군부와의 접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④ 지적 재산권 및 무역분쟁

중·미간에 경제적 마찰요인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극

52)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중국 협력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봉쇄정책을 주장하고 있다(1995.6.29).

53) 「朝鮮日報」, 1995.6.28, 29 참조.

단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조짐이 보이기는 했으나 상호 경제의 보완적 필요성에 따라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연초에 중·미간에 지적 재산권 협상이 결렬(1995.1.28)되고, 미국이 대중국 보복시한으로 정한 2월 4일 이전에 회담이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하게 되었다.<sup>54)</sup> 이에 미국이 중국산의 35개 제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2.4)하자 중국도 역보복조치를 단행(2.4)함으로써 양국은 극단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 미국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시장을 정화하며 복사판에 대한 시장유출을 막고자 하는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계속 압력을 행사한다면,<sup>55)</sup> 중국의 경제 및 정치를 미국에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책략적 차원에서 간섭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sup>56)</sup> 중·미간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공박하였다.<sup>57)</sup>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원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오리리 에너지 장관의 방중시(2.19~24)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일단 지적 재산권 협상은 타결(2.27)될 수 있었고,<sup>58)</sup> 지적 재산권 보호협정이 체

54) 「新華通信」, 1995.1.28.

55) 미국의 무역제재조치로는 미국사상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人民日報」, 1995.2.5, 6 참조.

56) “高價, 高壓,” 「文匯報」(1995.1.3).

57) “中美貿易戰能否避免?” 「文匯報」(1995.1.9).

결(3.11)되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시장개방에 힘입어 중국의 대미수출은 30억 달러에서 3백80억 달러로 1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995년의 경우 전년보다 60억 달러가 늘어난 3백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단 한 사례도 없는데 반해, 중국이 이를 위반<sup>59)</sup>함으로써 엄청난 무역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경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sup>60)</sup> 반면 중국은 鄧小平 사망 압박으로 인한 내부동요를 저지하기 위한 수습책으로 대내외에서의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

58) 중국은 미국과 60억 달러 상당의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의 불법 복제품 제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자국의 경제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59) 미국 기업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학제품, 음반, 서적, 비디오, 상품권 등의 지적 소유권에서 중국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60) 또 다른 해석으로는 중국의 지방 분권화를 해안지방, 국경지방, 내륙지방으로 구분할 때(Brantly Womack and Guangzhi Zhao, "The Many Worlds of China's Provinces: Foreign Trade and Diversification," Segal, *China Deconstructs*, p. 322 재인용. 경제발전을 위하여 「원하는 지방분권화」(wanted decentralisation)와 「원하지 않았던 지방분권화의 결과」(unwanted consequences of decentralisation)에 따르는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 감소로 인하여 지적 소유권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하위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Segal, *China Deconstructs*, pp. 343~52 참조.

한 반격으로 강경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치적으로 허약한 정권이양기에 미국이 중국의 사법심판제도와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국내의 입법과 사법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통상문제 차원 이상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국가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불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비난 성명에도 불구하고 鄧小平 이후를 겨냥해서 미국과의 정면대결은 피하고자 한다. 특히 지적 재산권문제는 WTO가입 교섭의 핵심사항일 뿐만 아니라<sup>61)</sup> 협상결렬은 鄧小平 이후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권력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경우 鄧小平 사후에 전개될 권력투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sup>62)</sup>

따라서 중국측은 미국이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국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을 “지나친 압력행사”로 간주하여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63)</sup> 미국 내에서

61)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 1995.

62) 이봉 총리는 핵심문제는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世界日報」, 1995.2.14.

63)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초강경 입장은 앞으로 전개될 한·미간의 시장개방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국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東亞日報」, 1995.2.5.

는 언론과 업계뿐만 아니라 공화당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노선을 지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까지도 자국이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을 염두에 두고 묵시적으로 미국편을 들고 있다.<sup>64)</sup>

한편 미국의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협상 거부를 반미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鄧小平이 요양하는 동안 중국의 실권을 가지게 된 최고 지도자들이 보다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sup>65)</sup> 江澤民 주석이 주도하는 일부 테크노크라트들과 군부인사들의 입김이 강해짐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사태발전이 야기되었으며 앞으로 경제·정치의 전반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鄧小平 사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sup>66)</sup>

#### 나. 반미패권과 경제·안보협력의 딜레마

미국은 닉슨이 미·중수교를 위해 1972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64)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될 경우 1천2백여 개의 한국 제조업체 가운데 미국의 무역보복조처에 영향이 예상되는 한국 기업은 3%인 30여 기업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의 통산현안이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한·미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참조, 「한겨레신문」, 1995.2.7.

65) *Washington Post*, February 5, 1995.

6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6, 1995.

때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화는 최근에 위협한 수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갈등관계가 현시점에서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상호 정상회담을 통한 정국경색을 타개하고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지만 갈등적 요소는 제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지금 중국이 오히려 환태평양 역내에서의 세력균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도전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 1995.2)<sup>67)</sup>와 「나이 이니셔티브」(the Nye Initiative)<sup>68)</sup>를 통하여 적극적인 동아시아 참여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이웃을 위협하는 행위나 타이완에 대하여 취하는 적대적 행위야말로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중국이 주변국가에 적대적일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석유가 풍부한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의 권리주장에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67) 同 보고서에서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 10만명 수준을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하고 지속적인 동아시아 안보 공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8) 미국방부 나이(Joseph Nye) 국제담당차관보는 미·일 안보동맹을 지속하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군인사를 교류하는 등 미국의 경제이익에 부합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면적인 참여정책을 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냉전 종식으로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전보다 감소되었으나 국제문제 해결과 지역분쟁 해결에서 중국과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鄧小平 사후에 중국 미래의 진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10~15년간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국익이 상충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일부에서는 대중 경계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sup>69)</sup>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미국이 티벳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강한 어조로 반격하고 있으나 옐친의 체치니아 공격에 대해서는 생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한다.<sup>70)</sup>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실질적인 외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협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봉쇄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뒷마당(backyard)에서까지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둘째, 세계적인 탈냉전에 따른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중

69) Swaine, *China* 참조.

70)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16, 1995.

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 확대 기도에 불만을 품어 왔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정상화를 달성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핵개발을 포함하는 비이성적정책에 대한 지지 철회로 보다 균형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sup>71)</sup>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북한핵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경제제재와 같은 미국의 정책 옵션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미회담 타결 이후 북·미간 관계개선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和平演變」시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鄧小平 이후 권력다툼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질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허약해져서 미국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반미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아·태 강대국으로서 지위확보와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개혁·개방에 힘입어 국력신장을 꾀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목표로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소극방어전략에서 적극공세전략

71) 蜀聲, “中共鬪美—王牌—北韓核武,” 「爭鳴」(1994.5), p. 77.

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방대한 재정적 자에 허덕이고 있으나 1989년 이래로 매년 10% 이상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 구입 결정 등 군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 강대국으로의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단일패권주의 및 최근 미·일 안보동맹체 제 지속 등 안보전략 재조정 움직임에 대한 견제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sup>72)</sup> 또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1992년 2월에 「해양법」을 제정하여 남사군도 등을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으며 해군과 공군력 증강을 통한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최혜국대우와 인권문제<sup>73)</sup>의 연계정책 포기선언(1994.5.27) 이전 무역불균형문제<sup>74)</sup>를 둘러싸

72) 옌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江澤民 주석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5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옌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되었으나, 이번의 訪中이 실현되었다면 옌친의 집권 이후 4번째 북경 방문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73) 중국은 미국이 1994년 5월에 최혜국 지위를 갱신하기 직전에 부분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천안문사태로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던 인사들을 석방하였다.

74) 1990년 이후에 중국은 최혜국 지위와 GATT 회원국이 되기 위한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규모 조사 사절단을 파견하여 중미간의 무역마찰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정책은 Wei Zhengyan, "China's Diplomacy in 1993," *Beijing Review*, January 17~24, 1994, pp. 10~15; David Bachman,

고 미국과 상호마찰로 인한 불화를 겪기도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최혜국대우 연장과 인권문제간의 연계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은 다시 호혜적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에 정진하게 되었다. 중·미관계는 과거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맺었던 전략적 관계로 되돌아 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현실적 국가이익 우선적 추구원리에 따라 새로운 화해국면을 모색하고 있다.<sup>75)</sup> 와싱턴은 베이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였으며,<sup>76)</sup> 중국은 이를 중·미 경제관계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크게 반겼다.<sup>77)</sup> 이러한 노력은 올해 최혜국대우 연장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국은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견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견고한 경제 및 안보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

---

“China in 1993: Dissolution, Frenzy, and/or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XXXIV, No. 1 (January 1994), pp. 37~40 참조.

75) Qi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pp. 248~51.

76) Susumu Awanohara, “Breathing Space: Clinton Delays on Conditions to China’s MFN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p. 13; Barbara Rudolf, “Status Seeking,” *Time International*, May 31, 1993, pp. 14~16.

77) 『人民日報』, 1994.5.28 참조.

다고 판단하여<sup>78)</sup> 1994년 페리 미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다.<sup>79)</sup>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국의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GATT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1993.11)하였다.<sup>80)</sup> 또한 W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발달된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해주고 있는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적어도 동아시아문제에 있어서 역내질서 유지와 분쟁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영향력 확대는 봉쇄하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의 패권전략에는 반기를 들면서도 보다 긴밀한 경제·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미관계에는 견제요인과 협력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20세기 초 영국은 독일의 증대되는 힘을 두려워하고 독일은 영국의 봉쇄를 두려워해서 양측이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치 현재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편한 관계와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의 반미패권전략은 국제무

78) 關文亮, “自相矛盾的美國對華政策,” 「文匯報」(1993.8.29).

79) 「人民日報」, 1994.10.19, 20 참조.

80) Joseph Fewsmith, “America and China: Back from the Brink,”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4), pp. 250~55.

대에서의 자국의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 될 것이며, 과거의 은밀한 북경-와싱턴 관계가 그대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패권의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 第三章 1990년대의 中·北韓關係

탈냉전기 중국의 동북아정책은 1990년대의 중·북관계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전방위적 평화공존정책의 일환으로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고 노력함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중·북관계는 소원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은 변경외교를 주창하며 북한과 화해기를 모색하게 되며,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지원의 차원에서 북·미간의 급속한 관계진전은 원하지 않으며, 중·미관계 악화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은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중국의 동북아정책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라는 거시적 틀하에서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협상수단에 의해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중·북간 쌍무적 차원이라는 제한된 시각보다는 동북아의 다자적 관계의 틀 속에서 중국의 동북아 외교·안보정책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국의 ① 동북아에서의 전방위적 평화공존정책, ② 변경방어정책, ③ 동북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동북아에서의 전방위적 평화공존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현대화라는 최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념과 체제상의 상이성보다는 공통이익 존재 여부에 대외관계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주독립외교원칙에 입각한 남북한과의 동시수교를 통하여 평화와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全方位的 平和共存外交」<sup>81)</sup>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적극 권장하면서 북한이라는 군사긴장유발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변경문제를 포함한 안보협력 약속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고, 일본과의 정치·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과거 갈등관계에 있던 주변국인 인도 및 베트남 등과의 국교정상화도 추구한다. 특히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유럽국가

81)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1994.3.24).

들과 미국의 제재정책에 실망하여 아시아 중심외교에 역점을 두어왔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활동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구소련 및 동구의 몰락 이후 탈진영, 탈이데올로기를 통한 실리추구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 독립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남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현상유지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추구가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나. 변방외교

중국이 자국의 변경지역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邊方外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가에 대한 압력인 동시에 변경지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체제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군사 압력 행사를 반대하여 왔다. 중국의 일부에서는 소련의 해체에

따른 냉전의 종식으로 인하여 핵확산은 “세계평화가 직면한 숨겨진 위협”으로 이제 불가피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82)</sup>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이 IAEA 규정에 따라서 사찰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타 변경지역인 티벳, 신강, 내몽고 등에 대한 결속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은 변방국인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가 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면서 변방외교에 비중을 두고 있다.

#### 다. 동북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 지원

동북아 신질서 개편과 관련된 중국의 「反美霸權」전략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틀 속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이념, 정치·경제체제, 발전 전략 및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경쟁과 갈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현재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주도로 동북아의 질서

---

82) 「大公報」; “The World Faces a Crisis of Nuclear Proliferation,” *FBIS-CHI-94-118*, June 20, 1994.

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미국에 대한 타협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방해하고 전복하고자 하며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자 한다고 胡錦濤 일행이 공개적 탄원서를 鄧小平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3)</sup> 이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힘우위의 반중국 전략을 접하면서 중국은 다른 방도가 없으며, 중·미관계가 3개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고도 명확하게 미국에 알리고 세계에 대해서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태도는 1993년 11월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sup>84)</sup> 더욱이 APEC회의를 마치고 김영삼 대

83) 「爭鳴」(1993.6)는 100명의 장군이 鄧小平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FBIS-CHI-94-087*, May 5, 1994; 「新華」, 1994.6.10: "Qian Qichen Views International Situation, Foreign Policy," *FBIS-CHI-94-112*, June 18, 1994; 「大公報」, 1994.6.7; "Cooperation with China in World Trend," *FBIS-CHI-94-110*, June 8, 1994, p. 4; 「人民日報」, 1994.5.16: "Interviews with Hou Zhitong and Lou Zhitong," *FBIS-CHI-94-098*, May 20, 1994; 「法制日報」, 1994.6.22; Li Zerui, "Can New Concept of Sovereignty Legalize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FBIS-CHI-93-126*, July 2, 1993.

84) 중국은 APEC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도되었으나 미국 주도의 APEC보다 실질적으로는 ASEAN의 입장에 더 동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할 때 江澤民的 정상회담 참가는 클린턴을 만나러 오는 기회로 삼

통령이 와싱턴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江澤民은 카스트로가 1959년에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국민자격으로 방문하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배려를 과시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사회주의 동맹국가인 북한을 간단하게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반미패권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주도의 동북아 질서개편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동북아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기본 전제로 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 2. 中·北韓關係의 전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세력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가 냉각됨으로써 「불균형질서」적 성격이 더욱 부각되었으나 북·미관계 진전으로 「균형질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북관계의 변천과정을 중국의 전방위적 평화공존정책의 일환인 한·중수교로 인한 소원기, 중국이 변방외교로 북한과 화해하여 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하는데 따른 화해기, 중국의 동북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 지원정책 및 중·미관계 악화로 인한

---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관측일 것이다.

전제적 협력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소원기

동북아 지역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탈냉전 조류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이은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중국만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남한의 북방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얻어 한·러수교에 이어, 중국의 전방위적 평화공존의 의도와 공감대를 이룬 한·중수교가 이루어지자 북경과 평양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sup>85)</sup> 북한은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마저도 비난하게 되었으며,<sup>86)</sup> 나아가 駐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중국도 러시아가 군수물자지원을 중단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감축하였으며,<sup>87)</sup> 북한

85) 한·중 관계정상화가 발표된 다음 날인 1992년 8월 25일에 김일성은 앞으로 러시아를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민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정신적 폭탄과 실질적 폭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新報』, 1993.5.7.

86)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1992.9.27)했을 때 북한은 중국이 제국주의에 굴복한 배반자라고 비난하며 반제국주의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북한 『중앙방송』, 1992.9.27.

의 군사적 요구가 있더라도 방어목적이 아니라면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sup>88)</sup> 중국은 1993년 초반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sup>89)</sup> 특히 3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핵문제해결을 둘러싸고 더욱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수교 및 중·북관계 소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불균형질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 나. 화해기

중국은 한·중수교로 인한 소원기를 거치면서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sup>90)</sup> 한편, 1993년 3월 러

87) 「鏡報」(1993.6).

8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3, 1993.

89) 김일성의 80회 생일(1992.4.15)에 중국은 楊尙昆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였으나 81회 생일에는 아무도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에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남한을 최초로 방문(1993.5.26~28)하여 양국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90) 鄧小平의 南巡講話(1992.1.28~2.21) 이후에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李鵬 총리의 1993년 3월 15일에 행해진 工作報告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주변국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시아는 균형외교를 천명하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sup>91)</sup> 4월 말 고위급 관리를 서울에 파견하여 북한에 가스 및 무기공급을 재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자국의 결정을 알려주었다.<sup>92)</sup>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6월에 이르러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면서, 국방부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sup>93)</sup> 이는 미국과 남한에게 중국의 「변방외교」를 일깨워 주는 것으로, 한·중 관계를 유지하지만 북한과는 사회주의 동맹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도 중국의 변경국과의 교류는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조선전쟁 승리탑 및 기념관 건립시(1993.7.23) 중국은 김정일과 비슷한 나이의 차세대 지도자인 胡錦濤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遲浩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

91) 러시아는 핵관련 6개국회의를 제의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입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성 아·태총국장 솔로비요프는 「동북아 6개국 긴급회의」를 제안하였다(1993.3.19).

92) 러시아의 Kolkornov 외무부차관은 북한과도 정상적 관계를 회복할 것이지만 앞으로 이념적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993.4.29).

93) 일본의 공명당 당수 이시다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江澤民 주석은 중·북관계는 6.25 전쟁으로 맺어진 동지이지만 동맹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원, 「북한추세」(1991.10), p. 147.

견하여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sup>94)</sup> 중국의 李鵬 총리도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를 지지한다는 최초의 공식 선언을 하였다(9.9).<sup>95)</sup>

또한 한국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遲浩田 국방부 장관은 단동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개막식에 참가하고<sup>96)</sup>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9.9). 李鵬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여(10.28) 북한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화해 입장에 힘입어 북한은 10월에 미국의 에커만 아세아·태평양 소위원회위원장의 방북시 일팔타결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타진하였으며<sup>97)</sup>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94) 胡錦濤는 중국의 당과 정부, 그리고 모든 인민이 조선노동당의 노력을 치하하고 지지를 보내며, 전통적인 조중관계를 양국의 지도자들의 영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FBIS-CHI-93-114*, July 29, 1993.

95) 이러한 선언은 중국과 북한과의 상호관계에서 볼 때 金父子 승계체제 지지는 항상 협상(deal)에 의하여 얻어지는 산물이었던 점에서 주목되는 선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1984년 북한은 중국에 승계지지를 요청하는 대신 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고 「합영법」 등을 제정하였다. 1993년의 경우 북한은 중국이 승계지지를 천명해 준다면 그 대가로 핵개발 중지를 결정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주창준 대사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다.

96) Chae-Jin Lee,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Hoover Press Publication, 1996 forthcoming).

97) 에커만(Ackerman)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의 방북시 동행하였던

공식적으로 1개월 후에 뉴욕에서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하여 북·미회담에서의 일괄타결을 공론화하였다.<sup>98)</sup> 북한은 이러한 주장이 작년에 개최된 3단계 2차 북·미회담(1994.10.21)에서 관철됨으로써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sup>99)</sup>

이러한 북·미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에서 균형질서 모색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경제적 협력기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북간에 화해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

---

국무부 퀴노네스(Ken Quinones) 북한담당관에게 북한은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비공식 문건을 전달하였다(1993.10.12).

98)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측의 핵투명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북미 수교, 북한체제의 인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를 요구하였다(1993.11.12).

99)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문제의 한국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江澤民 주석이 일본의 호소카와 총리를 1993년 11월 APEC에서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서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북한과 협력하면서도 견제한다. 더구나 중·미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상대방을 미국에 대한 카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실리적 측면에서 견제적 협력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에 들어와서 중국과 북한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북한의 최광 참모총장이 6월 7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부문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북한은 그 대가로 동해안의 항구 사용권을 양도하고 시멘트와 비철금속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sup>100)</sup> 다시금 중국의 錢其琛 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101)</sup> 이것은 중국이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을 지속하지 않더라도 체제와 경제·군사문제에서의 지지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또한 중국측으로 할 수 있는 배려는 전부 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평화협정체결 공방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북한은 1993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를 미국에 공식적으로 제기

100) *FBIS-CHI-94-113*, June 13, 1994, p. 4.

101) "Qian Qichen Views International Situation, Foreign Policy," *FBIS-CHI-94-112*, June 10, 1994, p. 1; "China's Opposition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BIS-CHI-94-117*, June 17, 1994, p. 8.

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정전위에서의 철수를 강행 (1994.10.27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강화시켜준 결과를 가져왔다.<sup>102)</sup> 이러한 중국의 결정은 작년 10월 말 한국을 방문한 李鵬 총리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중국은 남북한의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시점까지 기존의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관련 국가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한이 정전협정의 조인당사국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sup>103)</sup>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북·미간의 협상 사안으로 국한시키려는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김정일체제 유지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3년 -4.3%, 1994년 -1.7%였으며, 또한 전력부족과 연료·식품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4)</sup> 또한 제2위 교역국(제1위는 홍콩)인 중

102) 북한 「중앙통신」, 1994.10.27.

103) 沈國放 중국의교부 부부장의 서울기자 회견, 1994.10.31.

104) 북한은 아직까지도 배급제도를 통하여 노동자 1인당 600g의 쌀을 배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쌀은 전체 배급량의 30% 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North Korea's Future in the Post Kim Il Sung Era," *Nejabishimaya Gajeta* (Russia), August 3, 1994.

국과의 1994년중 교역실적은 6억 2,374만 달러에 그쳤다.<sup>105)</sup> 최근 북한이 일본 및 남한 등에 긴급히 식량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sup>106)</sup> 북한의 심화되는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은 민심동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북·중관계는 작년보다 오히려 견제하는 측면이 강해진 감이 있다. 1994년 11월 李鵬 중국 총리의 방한, 금년 4월의 평양축전(4.28~9) 기간 중 평양-타이베이 간의 전세기 운항 및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 선정문제에 대한 북한의 다만 지지문제, 노동신문 북경특파원에 대한 중국측의 추방 결정, 江澤民 주석의 방한(11.13~17) 등으로 쌍방은 다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sup>107)</sup>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 교환방문을 통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 연초에 김명식 북한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1.29~31)한 데 이어,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일행(2.25~27)과 이희규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3.28~4.6)이 중국을 방

105)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종합보고」 (1995.1.21). 또한 중국의 대북원조도 에너지 등에서 20~30%로 대폭 삭감되었다. 「중앙일보」, 1995.1.22. 그리고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5.6), p. 78.

106) 「東亞日報」, 1995.6.8.

107) 기타, 북한은 올해 들어 문화대표단, 친선협회대표단, 노동당 대표단, 군친선참관단, 직맹대표단, 상업부 대표단, 교육대표단, 사로청 대표단 등을 중국에 파견, 쌍방간의 친선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문하였다.

중국측에서는 徐淸 당기울검사위 부서기를 단장으로 한 공산당 대표단(6.7~14)과 唐家璇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외교부 친선대표단(6.7~13)의 북한 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 대표단이 같은 날 각각 별도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쌍방간의 관계발전을 비롯하여 북한정세와 국제정세 문제, 북한핵문제 및 江澤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우려 등 현안 정치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sup>108)</sup> 또한 중국 인민군 친선 참관단 등 3개 중국대표단이 9월 20일 동시에 방문하는 등 9월 들어 방북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50주년을 계기로 당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江澤民 주석이 북한 방문을 희망하였으며 중국이 김정일을 초청하였으나, 탈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중간의 교역관계는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초 김복신 북한 부총리의 중국·북한간 경

108)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5.6).

제·무역 공동위 개최를 위한 방중(1995.1.26~28)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sup>109)</sup> 또한 북한은 쌀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료는 곧 쌀”이라고 강조하면서 1993년부터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 수입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sup>110)</sup>

1995년 상반기(1~6월)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7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9.1%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70.1% 감소한 3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수입은 전년동기비 7.5%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미 1994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수출입이 모두 크게 감소(수출 33.0%, 수입 29.5%)함으로써 무역총액이 전년보다 30.7% 격감한 바 있다. 금년도 상반기중의 무역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교역규모는 지난해의 6.2억 달러 수준을 크게 밑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북한은 최희정 조·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이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듯이 중국형의 개혁·개방을 제한적이면서도 선택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중국대표단의 격이 1994년보다 낮아졌지만 방문회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쌍

109) 이어서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1995.4.8)이 이루어졌다. 북한과 중국 흑룡강성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1995.2.22).

110)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5.2).

방관계가 이념적 혈맹관계에서 경제적 실리외교 차원으로 전환되어 가는 가운데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은 포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sup>111)</sup> 특히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체결 34주년(1995.7.11)을 맞아 쌍방간의 친선발전과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조약이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기할 의향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듯이,<sup>112)</sup>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급격한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0월 錢其琛 외교부장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전에는 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에서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시하고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중·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급속한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미국의 주도로 동북아에서 신질서가

---

111) 북한 인민 무력부 대표단 5~6명이 부부장 김정각 상장을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 외교부 산하 군축 및 평화문제 연구소가 평양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단장: 중국측 양성서 소장, 북한측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 소장) 하였다(1995.5.17~24).

112) 중국과 북한이 상호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렵게 되어 있다.

구축되는 것에 대한 견제로 이해할 수 있다.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북·미합의로 나타나고 북·미간 핵협상이 양측의 협상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미간의 협상타결과 북한의 대화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라는 군사적 긴장유발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북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sup>113)</sup>

이와 같이 중·북관계의 설정에는 미·중관계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협력적 견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은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며, 중·미관계는 과거의 밀접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미회담 타결 이후 북·미관계 개선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和平演變」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유엔 50주년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113) 李鵬 총리는 김정일체제 지지를 대표명하였다. 「新華通信」, 1995.1.18.

회복을 꾀하고 있으나,<sup>114)</sup> 앞으로 중·미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여기에 대만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된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정책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질서 형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

114) *Time International*, October 30, 1995. pp. 18~23.

## 第IV章 中·北韓關係 전망

중국과 북한은 현재 대내적으로 정권교체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 국내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며, 이는 중국 모델을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여려는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국내 정세를 살펴보고, 중·북관계에서 중국 분열 후 북한 붕괴의 경우, 불균형질서를 고착시키는 경우 및 균형질서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 1. 중국의 정세

올해 3월 중국 지도부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다가올 鄧小平의 사망에 대비한 포석으로 국내정책을 비롯한 인사관계를 마무리지었다. 최근 鄧小平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①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 가능성과 간부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② 부패척결을 기치로 권력투쟁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치 안정화정책이 시급하며, ③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로 인하여 민심동요와 사회불안이 확대되면서, ④ 중앙·

지방간의 발전전략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연해지역 성·시에서 중앙의 조치와 지시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115) 중앙·지방간의 갈등관계가 鄧小平 이후 정세의 주요변수로 부상하고 있다.116)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의 정세변화에 대해 사안별로 낙관적 및 비관적 시각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중국의 정세 변화를 전망할 것이다.

#### 가. 후계체제 및 세대교체

陳雲과 鄧小平의 사망으로 혁명 3세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나, 현재의 중국은 1976년 毛澤東 사후 시기와는 달리 江澤民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의 과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급진적 인사개편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은 자신의 사후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다져

115)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의 중앙지시 불이행 실태가 있다. 광둥·북건성을 중심으로 한 화남권은 중앙정부가 원유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한 조치(1993.1 배럴당 5달러에서 15달러)에 반발하여 국제 현물 시장에서 원유를 직접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대외거래를 행하고 있고, 광둥성에서는 중앙의 건축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의 목표를 중앙방침인 1994년의 9%보다 높은 15%로 설정하였다.

116)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鄧小平 死後 中國: 6개국 전문가 참여 연구」(1995.8) 참조.

왔다. 현지도부가 모두 鄧小平의 발탁 또는 승인에 의해 성장하였으며, 1992년 제14차 당대회부터 鄧小平의 뜻에 따라 江澤民 총서기 중심의 집단후계체제가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발전 성과에 힘입어 공산당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세대교체에 따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더욱이 공산당 내부에서는 1989년 천안문사태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내부 권력투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江澤民 중심의 집단체제는 종래의 毛澤東, 鄧小平에 비해서 카리스마적 지도력 및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위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군부를 아직 江澤民이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지도부의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117)</sup>

鄧小平 사후 일정한 기간동안 현재와 같은 江澤民 중심의 집단후계체제가 지속될 것이며 江澤民체제는 李鵬, 喬石, 朱鎔基 등 현 지도부와의 타협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국정을 운용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권력투쟁, 개혁 부작용 악화 등으로 내부혼란이 야기되고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이나 서방의 압력증대 등 대외적 위기가 조성될 경우, 군부와 보수파가 결합된 새로운 권위주의적 지도부가 출현될 가능성도 배제

---

117) "Prelude to Post-Deng Er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9, 1995.

하지는 못한다. 주로 서방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중국의 혼란이나 분열 또는 위기의 장기화<sup>118)</sup>는 그동안 중국의 착실한 경제 발전과 후계체제 대비 노력으로 볼 때 발생 가능성이 낮다.

장기적으로는 지도부의 정치적 생명은 혁명세대식 권위에 의존하기 보다는 능력과 국민적 지지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급기시되어 온 정치개혁이 사회의 다원화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간부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와 기능적 전문가집단에 의한 관료체제가 자리잡아 갈 것이며, 새로운 관료체제는 능력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 나. 부패척결 및 정치 안정화정책

중국전역에 걸친 부정·부패의 심화로 당원 및 관료는 과거 혁명시대에서와 같은 국민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9월에 개최된 공산당 14차 4중전회에서는 당 하부조직의 재건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척결운동의 과정과 연계되어 권력투쟁이 발생·심화될 경우 중국정세의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119)</sup> 江

118) 미국방성에서 중국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중국의 분열 가능성을 50%로 예견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하여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9) 江澤민은 陳希同 북경시 당서기를 해임하는 것을 시발로 고위관리

澤民은 陳希同 북경시 당서기의 사표수리<sup>120)</sup>를 시발로 성역없는 부정·부패척결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전 제거하는 한편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sup>121)</sup> 이러한 과감한 개혁조치는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鄧小平 사후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지도부 일각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소위 太子黨 및 이들과 연계된 군부와 지방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소지도 있어 江체제의 안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지도부는 사회안정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을 정비하고 사회통합운동(애국주의 고취, 유교사상학습, 鄧小平 문선학습 등)을 통한 정치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당간부들의 부패 추방과 당의 개혁을 통해 일반대중의 당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人民日報』, 1995.4.2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11, 1995, pp. 14~15.

120) 북경시 부시장, 재정·공안국장 등 고위관리 60명에 대한 검찰수사 중 동사업 승인과정에서 거액의 사례비를 수뢰한 王寶森 재정담당 부국장이 자살(1995.4.4)하고 蘇仲 양한웅홍 전공안국장이 잠적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 陳希同 당서기를 해임조치하면서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121) 陳雲과 鄧小平의 사망이 이어진다면 그동안 막강권한을 누려온 원로들의 퇴진을 의미하며, 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은 張震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통해 군부내 상당한 지지세력을 가진 楊尙昆 전 국가주석에게 군 고급장교의 접촉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다.

#### 다.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지속 추진

중국 국민들 사이에는 현재 안정을 희구하는 심리가 지배적이다.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목격한 중국인에게는 급진적 변혁보다는 안정 속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四項基本原則을 견지하고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확대하고자 한 鄧小平의 정책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면서 국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문사태 및 동구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해체 등 국내·외적 위기시에도 중국지도부는 체제단속과 개혁강화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체제의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중국은 국가역량의 중점을 종래의 「계급투쟁」 등의 이념적 혁명성 강조에서 「생산력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추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15년간 연평균 9.3%의 고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혁·개방이 국민들 사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은 매우 탄력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사회주의체제가 시장원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점진적인 체제전환과정을 통한 경제우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 라. 중앙·지방 갈등 심화

1978년 말부터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계층별 빈부격차가 현저해지고 있고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다. 특히 빈부격차가 도시와 농촌, 연안과 내륙간에 크게 벌어지는 동시에 개혁·개방에 따른 소수 민족의 경제적 절대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민족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전통적인 지방주의가 부활되고 소수민족의 역량도 증대됨으로써 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sup>122)</sup> 반면,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조절,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의 방면에서 역할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이 진전됨에 따라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또한 각 지방이 경제적 이해에 따라 경제권역을 형성하려는 지역주의의 경향이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분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국내문제에서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무기나

12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11, 1995, pp. 18~20.

인권문제와 같은 주요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 소유권과 같이 중앙정부의 노력이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에까지 미치지 못함으로써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sup>123)</sup>

이와 같이 중국이 지금까지 江澤民 후계체제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세대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江澤民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부패척결 의지에 따른 정치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들이킬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과 지방, 연안과 내륙 및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조정이 주목된다.

## 2. 북한의 정세

북한은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외관계, 사회문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체제위기의 극복 수단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

---

123) Segal, "Deconstructing foreign relations," pp. 322~55.

정일 정권은 「유훈통치」를 통하여 자신의 승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식량난을 타개하고자 한다. 승계체제가 안정되면서 김정일 정권은 군부 중심의 권위체제를 확보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담당할 관료체제를 조직하기 위해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경제력 회복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중·단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북한체제 개혁·개방의 기본 방향은 최근 발표(1995.6.17)된 김정일의 논문<sup>124)</sup>에서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사상이라는 형태로 강조함으로써 일반적인 국가사회주의 체제원리로 환원하고 있다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동구의 국가사회주의체제가 결국에는 체제의 개혁·개방으로 변신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북한 역시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개혁·개방은 북한 변화의 근본방향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체제의 운영원리로 강

---

124)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1995.6.21.

조하는 한편 경제문화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sup>125)</sup>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활동하는 경제인들이 일정한 법의 테두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행위 및 경제행위에 대하여 북한이 국가차원에서의 법적 보호를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의 공개적 선언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비록 부르조아 사상의 침입에 대해서는 억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개방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일 노선의 변화는 북한체제가 앞으로 정치·경제적 대외관계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

125) “(사회주의) 국가기관들은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 인민들이 법규범과 관리질서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 부르조아 반동사상(이) 침습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로동신문」, 1995.6.21. p. 3.

### 가. 유훈통치, 권력승계 및 세대교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승계체제의 상징적 정당화를 위해 「유훈통치」를 통한 이념적 승계를 강조하고 있다.<sup>126)</sup> 특히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의 성립이 위기극복을 위한 김일성 및 당 지도부의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sup>127)</sup> 김정일은 당분간 실질적 업적성취가 표면화될 때까지 유훈통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김일성 1주기를 앞두고 나타난 ‘김일성송가’는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sup>128)</sup> 이는 유훈통치의 연속선상에서 김정일의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충성심을 극대화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행위로 판단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권력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권력승계가 완전히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관료조직을 정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능적 전문가 집단의 등용 등을 위해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

126) 김성철·김병로·이금순,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참조.

127) 류길재, “북한체제 ‘변화’론의 재고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서울: 나남, 1993), pp. 424~28.

128) 「內外通信」, 제9576호, 1995.7.5.

이다. 이러한 세대교체과정은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군사적 위계체계의 확립을 위해 김정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혁명후 세대들에 의한 군부내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미간 경수로 지원협상 등 대외협상에서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외교적 유연성은 세대교체의 방향이 개혁·개방을 주도할 수 있는 관료의 등용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나. 식량난 및 기타 물자난 극복

북한은 최근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총 3백여 만톤에 달하는 곡물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29)</sup> 식량난의 극복은 당장 김정일 정권의 승계체제 공고화 및 북한 사회의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최근까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하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전체 교역량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과 북한간에는 약 8억 9천만 달러 정도의 무역이 행해지고 있고 이 중에서 7억 달러는 중국의 동북지방인 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 등의 지방 3성과 주로 이

129) 「중앙일보」, 1995.6.7.

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경무역형태의 북·중무역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심화되는 식량난과 생필품난은 가장 심각한 체제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중국은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

식량난과 함께 사회간접시설 미비로 병목현상을 포함한 물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및 산업원료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협상 및 경수로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중유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해외원조에 의존하여 식량난을 포함한 물자난을 극복하고, 경제력 회복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벌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이 당면한 식량부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원조를 바라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북한이 물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차원에서의 체제개방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30)</sup> 따라서 북한은 점차적으로 현실성에 입각

130) 와다 하루끼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난을 ... 대외적으로 숨기지 않고 대책을 현실적으로 취하고 있다. ... 자신의 불리한 점을 적에게 철저히 감춘다고 하는 유격대식으로부터 탈피했다고 한다면 변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다.” 와다 하루끼, “김정일 노선의 ‘절제된’ 변화,” 『한겨레신문』, 1995.7.15.

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체제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경제적 위기 극복 및 개혁·개방 추진

북한의 체제위기는 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가능성을 회복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승계가 완료되고 북한 사회가 동요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정치체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실용노선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1)</sup>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체제개혁·개방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이 마련되면 점차적으로 선택적이지만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의 개방전략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 현재 북한이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은 남한, 미국,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경제력 회생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진-선봉지역의 경제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자신감을

131) 「중앙일보」, 1995.5.29.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은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관광단지개발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2)</sup>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개방전략은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될 새로운 경제질서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장차 동북아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개의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는 남·북한,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環東海經濟圈으로, 중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함으로써 환동해경제권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環黃海經濟圈으로, 일본은 남한 및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여기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전망을 조망해 볼 때, 북한은 한편으로는 나진-선봉지역 및 금강산지역 경제개발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남포공단 및 신의주지역 경제개발을 통하여,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질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개방·개혁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3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easibility Study of Kumgangsan Tourist Development* (March 1993).

## 라. 외교적 고립 탈피 및 서방과의 관계개선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권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서방 및 일본·대만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외교관계의 개선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핵문제 이후 북한이 봉착하게 된 외교적 고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외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동시에, 또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의 국제적·군사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과정에서 보여주는 적극성 및 공세적 외교전략은 북한의 대서방 외교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김정일의 등장으로 예측되는 후계체제의 북한은 기능적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식량난 및 물자 부족과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폐쇄정책으로 야기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하여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에서 일정한 경제적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대내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정치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3. 中·北韓關係 변화 전망: 시나리오

앞에서 살펴본 중국과 북한의 정세를 바탕으로 중·북관계는 다양하게 예상될 수 있다.<sup>133)</sup>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① 긴장관계, ② 군사적 혈맹관계, ③ 선택적 유대관계, ④ 우호적 변방관계)들은 현재의 중·북관계에서 서로 결합하고 있는 상이한 경향들을 검토하고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개연성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균형질서」로의 이행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중·북관계는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상호배타적으로 실현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서로 혼합되거나 순환해서 나타나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33) 구중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아시아사 회과학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장래와 한반도」 (1995.4.11), pp. 16~36 참조.

### 가. 긴장관계

중국과 북한은 각각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즉 구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국가로부터 사회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력이 이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위가 재분배되고 행사되는 메카니즘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현재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 심각한 환경문제, 높은 인구 증가율,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안정 등 매우 위협적인 국내문제들에 당면해 있다. 특히 앞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자원도 고갈되어 기본적인 식량과 석유자원의 부족현상으로 식량 및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일체제 공고화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함으로써 국민적 합법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북한에 충분한 원조를 할 수 없게 되고 중국은 북한의 체제내구력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최소한의 원조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북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

는 소원해질 것이다.<sup>134)</sup> 또한 앞으로 북한이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sup>135)</sup> 인접국인 일본과 남한도 핵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유일 핵보유국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sup>136)</sup> 중국은 마침내 북한을 외면하게 됨으로써 중·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북관계는 소원해지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어 현재의 「불균형질서」가 고착화될 것이다.

#### 나. 군사적 혈맹관계

중국은 동구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의 바람막이가 되어왔다. 현재 국제전략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공산국가로서의 과거 군사적 혈맹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러시아가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내부 진통과 동유럽에서의 구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134) 실질적으로 李鵬 총리 訪韓 이후 중국과 북한은 사사건건 부딪쳐 왔으며, 가짜 골동품 판매사건으로 노동신문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일보」, 1995.5.10.

135) 吳邦國 부총리가 북한의 핵합의 준수를 최초로 언급했다. 「東亞日報」, 1995.4.6.

136) 그러나, 미·북 경수로문제 타결(1995.12.14)로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종결되었다는 데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탈냉전시기의 세계가 몇몇 주요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냉전 이후 전면적 전쟁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양극체제의 쇠퇴와 더불어 지역분쟁이 분출할 가능성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내부문제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긴장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과거의 군사동맹관계로 되돌아가서 동북아에서의 공통적인 군사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내구력 증진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상호 혈맹관계를 돈독히 하려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중·북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적대적 동맹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동맹세력의 진영간의 반목으로 또 다른 형태의 동북아 지역 「불균형질서」가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다. 선택적 유대관계

아직까지도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

한에 대해 중국은 중국형의 개혁·개방 모델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입장에서는 鄧小平의 四項原則堅持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며, 반면에 경제정책에서는 순환적인 개혁기와 긴축기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전면적 가격개혁 및 新파산법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패문제는 국가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중국과 인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통하여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제행위자로 부상한 데 힘입어 보다 광범위하고도 심도있는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上海·浦東지구는 금세기 말부터 세계금융중심센터로 부상되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은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지정된 경제특구를 폐지하고 전 지역을 개혁·개방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2020년대의 경제대국을 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안보전략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상황을 결

코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경제적 내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고립정책을 탈피하여 세계경제체제로 편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중용할 것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선정을 확대하고 합영법 등의 제도 준비를 통하여 현재의 소극적 개방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면, 북한은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중국 이외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의 확대를 원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개혁·개방과정에 적합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미국·대만 등을 포함한 국제정치 행위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각각 자국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위해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추진해 간다면, 중·북관계는 선택적 유대관계의 형태를 띠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전략적 기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호 경제적 내구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외교상대국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정립해 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적 내구력 향상을 권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발전은 향후 동북아에서의 「균형질서」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라. 우호적 변방관계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주도의 신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을 축으로 한 세력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반미패권전략을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각국은 자국의 이익추구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신질서 구축을 추구하고, 앞으로 미·중관계의 변화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관리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반영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대외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全方位外交」 추진 불변정책을 바탕으로 서방의 지속적 대중투자를 유치하고 무역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며 WTO가입 추진 등 세계경제권 편입 및 국제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경제력 성장에 부응하는 군사력, 특히 해군과 공군을 증강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군비증강 노력은 역내의 질서 재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이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는 서방측에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대만관계, 티벳, 남사군도 등 주권문제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강경노선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긴장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sup>137)</sup> 미·중간의 역학관계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질서 재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홍콩과 대만에서의 사태전개에 따른 미·중관계의 악화는 직접적으로 중·북관계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의 국회의원과 총통 선거의 향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이다. 대만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출신이 대만의회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은 鄧小平 사망 후 국내에서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대만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 할 수 있다.

또한 1997년에 예정된 홍콩 반환과 관련하여 대만과의 통일 문제에 대한 업적을 쌓고자 할 것이다.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의 1국가 2체제에 대한 성과는 대만과의 통일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시장경제제도가 공존하고 반환 후 1~2년간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홍콩의 주민들이 북경 정부를 믿고 만족하게 된다면 대만에 대한 흡인력이 강해져서 같은 방식의 통일 방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홍콩이 쇠퇴하게 된다면 통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현대화를 위한 주변

137) 헤리 하딩, 안인혜 역, 『중국과 미국』, pp. 475~511 참조

정세 안정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시장원리 도입과 개방확대로 인해 한·중간의 각 분야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지속적 경제력 성장 및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북관계는 혁명 1세대간의 관계가 종식되어 과거 보다는 실리에 기초한 관계로 변화될 것이나,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감, 전통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체제 전반에 걸친 내구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북한은 미국을 의식하여 상호 견제하는 측면은 있지만 우호적 변방관계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은 북한을 대미국견제를 위한 카드로 인식하면서 북한과 약화된 혈맹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북한도 북·미회담에서 관계개선을 포함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을 동일한 카드로 간주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한과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등거리 정책을 취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분야별로 정치면에서는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되 안보·경제면에서는 미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중국과의 기존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에서의 교차승인을 바탕으로 경제적 체제 내구력 향상을 달성한다면, 동북아에서의 「균형질서」가 새로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시나리오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가는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마지막 두 시나리오인 균형질서로의 이행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중국의 상황과 북한이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개혁·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형 기본 모델을 선택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관계가 표출되면, 북한은 국가이익을 앞세워 상호 우호적이면서도 편중되지 않는 변방관계를 중국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중국과 북한의 불안정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과 북한간의 긴장관계를 초래할 중국의 경제적 난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동맹관계의 전제가 되고 한반도에서 「불균형질서」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은 동맹진영의 형성 등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과 북한은 긴장관계나 혈맹관계가 아니라 상호 선택적 유대관계를 맺거나 우호적 변방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은 북한체제의 내구력 증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북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균형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第V章 結論

동북아에서의 탈냉전구조 정착기에 「불균형질서」에서 「균형질서」로의 관계변화는 1990년대의 중·북관계에 전반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반도에서의 질서 변화를 가져오는 추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방위적 평화공존정책에 입각한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며 이는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중국은 북한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반면, 남한과는 실리 위주의 「경제외교」로 경제협력의 증대를 추구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고립을 자초하게 한다던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남북한에 대해 탈진영·탈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자주독립외교를 견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 정상회담을 통하여 실리추구를 목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불균형질서」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변방지역 안보를 위해서 변경국인 북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김정일 이외에는

북한체제에서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 자국의 변경지역과 소수민족 관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북한은 체제유지, 안보 및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김정일 정권의 중·장기적 안정 여부에 대한 예측을 유보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인민들의 불만이 증폭된다면 내부모순으로 인하여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으며, 체제공고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군사긴장유발가능세력이 현상유지세력으로 정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상정할 수 있는 「균형질서」로의 전환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미래질서 개편에 대해 중국은 미국을 축으로 한 「단일지배체제」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조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향후 동북아 질서 개편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중국은 反美霸權戰略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북

한 카드의 효용성을 감소시키고 미국이 「和平演變」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미관계가 패권적 갈등을 겪으며 악화되고 있는 주변환경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에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남한으로서는 중·미 양국에 대해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중재자 역할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중·미 양국의 상호 견제심리를 지렛대로 카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 북한은 이를 교차승인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한반도에서의 균형질서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1990년대의 중·북관계는 전방위적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미에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의 혈맹관계로부터 상호 소원기에 접어들게 되어 동북아 지역의 불균형질서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변방외교의 일환으로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중·북관계는 화해기를 맞아 균형질서로의 이행을 위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방지원과 중·미관계 악화가 맞물리면서 중·북관계는 견제적 협력기를 맞게 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균형질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북

한의 국내적 요인은 양자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국가이익을 앞세워 상대방을 협상수단화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하여 앞으로의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판단해 볼 때, 향후 중·북관계는 상호 반목으로 인한 긴장관계, 혹은 동맹권 부활로 인한 과거 군사적 혈맹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불균형질서」가 심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중국형 개혁·개방 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북한과 선택적 유대관계를 맺고, 중국은 동북아 주도권 확보전략의 완충역할로서 북한과 우호적 변방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이러한 두 시나리오의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서의 한국의 대러·대중 관계 정상화로 인한 「불균형질서」에서 탈피하여, 탈냉전시대에서의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기반으로 미·중·일·러의 남북한 상호 교차승인을 통한 「균형질서」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sup>138)</sup>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등

138)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장할 것이다.

이제 주변국의 동북아전략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남북한관계는 장차 한반도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각각 「남한의 이해」나 「북한의 이해」만을 고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장차 통일을 달성했을 때의 번영을 위한 「한반도의 이해」를 공통분모로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을 통하여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정학적 중요성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관계 개선 우선순위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의 대북투자나 관계개선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과연 북한의 경제발전을 원하고 교차승인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여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영향력을 잃었다는 중국의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대한반도 정책견지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균형된 외교감각에 기대를 걸어

---

균형은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 북한, 미국 및 중국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북한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미온적 입장, 북·중동맹조약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한국을 아직까지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이중성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과의 미흡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등한 입장의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록 I>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p. 161~6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 위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관계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소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권 대표 김 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전권 대표 주 은래

<부록 II> 중·북한협정체결

- |            |                                       |
|------------|---------------------------------------|
| 1949.12    | 통상우편협정                                |
| 1953.11    | 경제·문화협조 및 지원협정 체결                     |
| 1957.12    | 과학기술협조협정                              |
| 1958.9.27  | 중요물자 공급에 관한 협정 및 차관 제공<br>협정 체결       |
| 1959.12    | 항공운수협정                                |
| 1959.12    | 문화협조협정                                |
| 1960.10.13 | 중·조 차관협정 조인(1961~64년 사이에 장기<br>차관 제공) |
| 1961.7.11  | 중·조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체결                 |
| 1962.11    | 통상 및 항해조약                             |
| 1970.10    | 경제원조 및 1971~76년간 장기통상협정 체결            |
| 1971.9     | 군사 무상원조협정 조인                          |
| 1973.6     | 경제기술협조협정                              |
| 1977.3     | 장기무역협정 조인                             |
| 1978.6     | 압록강-두만강 수문사업합작협정 조인                   |
| 1980.1     | 국경하천운송협력협정 조인                         |
| 1980.3     | 무역의정성(평양)                             |
| 1980.11    | 보건협정(평양)                              |
| 1980.12    | 과학협력협정(북경)                            |

- 1980.12 국경방송의정서(평양)
- 1982.10 장기무역협정(1982~86)
- 1982.11 무역수지, 비무역수지, 통화교환협정
- 1982.12 무역협정(북경), 출판분야협력 강화협정
- 1985.1 무역협정(북경)
- 1985.2 철도협정
- 1985.3 1985~86년 문화교류협정(평양)
- 1985.11.26 영사협정 조인
- 1986.3 보건 및 의학과학협력 협정
- 1986.8.8 1987~91년 장기무역협정(북경)
- 1989.3.4 북한·소·중·몽골, 철도수송의정서 조인(북경)
- 1989.4.5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개발 증진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평양)
- 1990.11.27 중국, 대북한 경제원조 협정 체결(북경)
- 1991.12.23 북한·중국·소련·몽골 4개국, 철도협정 체결
- 1992.1.26 무역협정 체결(경화결제방식 적용 규정)
- 1992.2.29 보건 및 의학과학협정 체결

### <부록 III> 한·중수교 이후 중·북한간 인사교류 현황

- 1992.8 송청위 제남군구 정치위원 방북
- 1993.1 진창본 중국 문화부 부부장 방북
- 1993.2 송재성 북한 고등교육부 제1부부장 방중
- 1993.4 무상성 중국 호북성 인민정치협회 부주석 방북
- 1993.5 백경부 중국 공안부 부부장 방북
- 1993.5 박춘근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방중
- 1993.6 김국삼 북한 직업총동맹 대표단 부위원장 방중
- 1993.7 호금도 당정치국 상무위원, 지호전 국방부장 등  
중국대표단 방북  
- “전승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 1993.9 왕한빈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
- 1993.10 정석림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부부장 방북
- 1993.11 홍학지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방북
- 1993.12 허백산 북한 문화예술부 부부장 방중
- 1994.1 중국 유충덕 문화부장 방북
- 1994.1 황장엽 북한 최고회의 외교위원장 방중
- 1994.2 이숙쟁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1994.6 최광 북한 총참모장 방중
- 1994.7 이성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방중
- 1994.8.20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김양건 방중  
- 북한, 鄧小平 90회 생일축하

- 1994.8 송호경 북한 외교부 부부장 방중
- 1994.9.27~10.4 북한 당·정 대표단 10명 방중(단장: 이종옥  
부주석, 수행 9명)  
- 중국 45주년 국경일 경축
- 1994.10.4~12 만영상 중국 외교부 기율검사위 서기(차관급)  
등 대표단 방북 - 10.6 수교 45주년 기념
- 1994.10.5 김정일-江澤民 국가주석간, 강성산-李鵬 총리  
간, 김영남 외교부장-錢其琛 외교부장간 축전  
교환(10.6 수교기념)
- 1994.10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 방북(단장: 정유고  
중앙위원 겸 하북성 당서기)
- 1994.10 북한 전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대표단 방중  
(단장: 정두환 중앙위 공동의장)
- 1994.10 북한군 친선참관단 방중(단장: 오용방 북한 부  
참모부장)
- 1994.11 최광 북한군 총참모장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문 순로에  
경유 광주 방문
- 1994.11 북한 노동당 친선대표단 방중
- 1994.11 김정운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등  
동북지방 방문
- 1994.12 현준극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방중

- 1994.12 북한 국가계획위 부주임 등 일행 6명 방중
- 1994.12 중국 공산당 대표단 방북 예정(미확인)
- 1995.1.17~23 북한 장철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장 정례 방중
- 1995.1.26~28 김복신 북한 부총리 방중  
- 중국·북한간 경제·무역 공동위 개최
- 1995.1.29~31 김명식 북한 국가주석 겸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중
- 1995.2.25~27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일행 중국 방문
- 1995.2.25~3.4 조·중 친선협회 대표단 7명 방중  
(단장: 최의정 회장 - 북한 과기위 주임)
- 1995.3.28~4.6 북한 노동당 대표단 방중  
(단장: 이희규 부부장)
- 1995.4.4~13 북한 인민 무력부 대표단 5~6명 방중  
(단장: 부부장 김정각 상장)
- 1995.4.8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방중(평축 준비물자 구매차)
- 1995.4.26~5.3 중국 전인대 화교위원회 사절단 방북  
(단장: Liu Zhen Hua 부주임)
- 1995.5.17~24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 연구소-북한 외교부 산하 군축 및 평화문제 연구소간 세미나 개최(평양)

- 단장: 중국측 양성서 소장, 북한측 송호경  
소장(외교부 부부장)
- 1995.6.7~13 중국외교부 친선대표단 방북  
(단장: 唐家璇 부부장)
- 1995.6.7~14 중국 공산당 대표단 방북  
(단장: 徐清 당 기율검사위 부서기)
- 1995.9.20 중국 인민군 친선 참관단 등 3개 중국대표단  
방북
- 1995.10.10 조선노동당 창건 50주년으로 당차원의 교류  
활성화

**<부록 IV>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 및  
남한과 북한의 입장**

현 안	중 국	미 국	남 한	북 한
3국간관계 (한·중, 중·북한, 남·북한)	상호우호 관계 희망	한·중관계 지원 북·중관계 불원 남북관계 지원	중·북한 관계 강화 불원, 남·북 화해 적극 추진	한·중관계 긴밀화 반대, 남·북대결 태도 견지
북한 정권 유지	북한 정권 붕괴 불원, 북한 안정 지원	급격한 북한 붕괴 불원	갑작스런 북한 붕괴 불원	정권붕괴 불원
중국의 대북한 지원	정치·경제· 외교적 지원 최근 부담감 상승	무관심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유도 방향의 지원은 동의	중국에 지원 요청 의면상 “자주” 강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영향력행사 자제(북한의 반발·서방 압력 우려)	영향력 행사 요청	영향력 행사 요청	“자주” 강조(영향력 행사시 강력 반발)
탈북자 처리	대북송환 자제 중국체류 목인	인도적 차원 지원	최소한 대북 송환 자제 요청 조용한 처리 필요	중국에 대해 범죄인 인도협약 준수 요구 자제 검거인원 파견
남북 통일	자주·평화적 통일지지	평화적 통일 지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방제 통일방안 흡수통일 반대
남북 교류	정부·민간 차원 교류 병행지지	지원	정부·민간차원 교류 병행 지지	민간차원 교류만 선별 희망

현 안	중 국	미 국	남 한	북 한
북한 핵문제	한반도 비핵화 지지  절대 대화해결 지지 (4자 3채널)  미·북 10.12/6.13 합의지지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화해결 지지 합의 수용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화해결지지 (남북대화 중요)  미·북 10.13/6.13 합의수용	핵개발 추진  미·북대화 해결 (남북대화불요)  미·북 10.12/6.13 합의수용
정전 협정	정전협정 대체 불가피  협상에 남북한 미·중 참가 필요  신협정 체결전 기존 협정 준수 필요	정전협정 유지  대체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북·미평화협정 불필요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유지의 기본틀  정전협정대체 문제는 남북당사자간 협의  정전협정 준수 필요	정전협정 무용  미·북간 협상으로 평화협정 체결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
주한 미군	역내 외국군 주둔반대  철수여부는 당사국 결정문제	계속주둔  통일후에도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주둔 필요	주한미군 주둔 절대 반대

현 안	중 국	미 국	남 한	북 한
중·북 상호원조 조약	북한의 남침시 중국의 파병 의미 오산(1994.10 이봉 총리)  조약 개정논의는 시기상 부적절(1995.5)	조약폐기 희망  직접적 언급은 없었음	조약개정·폐기 희망	조약유지 희망(폐기 의사 미표명)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민간차원 진행 희망  양자 대화 우선 필요  북한 참여 희망	정부·민간차원 희망  북한 참여 불반대	정부·민간차원 진행 희망  북한 참여 불반대	다자안보 대화기피
북한의 대외개방	북한 개방 권유(개방 방식은 북한 결정)	북한의 점진적 개방 유도	북한의 과감한 개방 유도	북한식 개방 추진(제한적· 점진적 개방)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	측면지원	소극적 지원  북·미관계 점진적 개선 희망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이 바람직	대미관계 개선 강력 희망  남북 관계와의 연계 반대

## 參考文獻

### 1. 단행본

- 김성철·김병로·이금순.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서울: 민족統一研究院, 1995.
- 민족統一研究院.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서울: 민족統一研究院, 1992.12.25.
- \_\_\_\_\_.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서울: 민족統一研究院, 1994.12.25.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鄧小平 死後 中國: 6개국 전문가 참여 연구」. 1995.8.
- 통일원. 「북한추세」. 1991.10.
-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5.2.
- 해리 하딩. 안인해 역. 「중국과 미국: 패권의 딜레마」. 서울: 나남출판, 1995.
- Kim, Samuel S.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 Lee, Chae-Jin.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Hoover Press Publication, 1996 forthcoming.

Swaine, Michael D. *China: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easibility Study of Kumgangsán Tourist Development* (March 1993).

## 2. 논문

구종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등소평 사후 중국의 장래와 한반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4.11.

류길재. “북한체제 ‘변화’론의 재고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서울: 나남, 1993.

안인해. “북·미관계 개선과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國際政治論叢」, 제34집 2호 (1994).

\_\_\_\_\_. “北韓의 情勢: 北·中關係를 中心으로.” 東アジア學會創立 5周年記念大會(日本) 발표논문, 1995.7.23.

Ahn, Yinhay. “PRC-DPRK Relations and the Nuclear Issue,”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 Awanohara, Susumu. "Breathing Space: Clinton Delays on Conditions to China's MFN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 Bachman, David. "China in 1993: Dissolution, Frenzy, and/or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XXXIV, No. 1 (January 1994).
- Chang, Maria Hsia. "China's Future: Regionalism, Federation, or Disintegrat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V, No. 3 (September 1992).
- Chen, Qiao.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 "China's Opposition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BIS-CHI-94-117*. June 17, 1994.
- "Cooperation with China in World Trend." *FBIS-CHI-94-110*. June 8, 1994.
- Fewsmith, Joseph. "America and China: Back from the Brink,"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4).
- Hass, Ernst. "Collective Learning: Some Theoretical Speculations," in Breslauer, George W. and Philip E.

Tetlock, eds. *Learning in U.S. and Soviet Foreign Polic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Interviews with Hou Zhitong and Lou Zhitong."  
*FBIS-CHI-94-098*. May 20, 1994.

Johnson, Marguerite. "Good Cop, Bad Cop: A Crackdown on Dissidents Creates a Human Rights Uproar on the Eve of Christopher's Visit," *Time International*. March 14, 1994.

Kaye, Lincoln. "China 1, America 0," *The Economist*. March 19, 1994.

\_\_\_\_\_. "No Stop to Uncle Sam: Beijing Gives a Frosty Reception to Christoph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4, 1994.

Kim, Samuel S. "China and the World in Theory and Practice." Kim, Samuel S.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Mansourov, Alexander Y. "North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May 1994.

"North Korea's Future in the Post Kim Il Sung Era."

*Nejabishimaya Gajeta* (Russia). August 3, 1994.

"Prelude to Post-Deng Er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9, 1995.

Prybyla, Jan S.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Socialist Countries." Yang, Sung Chul. ed. *Democracy and Communism*.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Qian Qichen Views International Situation, Foreign Policy."

*FBIS-CHI-94-112*. June 10, 1994.

"Qian Qichen Views International Situation, Foreign Policy."

*FBIS-CHI-94-112*. June 18, 1994.

Segal, Gerald. "Deconstructing Foreign Relations." Goodman,

David S. G. & Segal, Gerald. eds. *China Deconstructs: Politics, Trade and Regionalis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5.

"The World Faces a Crisis of Nuclear Proliferation."

*FBIS-CHI-94-118*. June 20, 1994.

Wiarda, Howard J.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Yang,

Sung Chul. ed. *Democracy and Communism*.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Zerui, Li. "Can New Concept of Sovereignty Legalize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FBIS-CHI-93-126*. July 2, 1993.

Zhengyan, Wei. "China's Diplomacy in 1993," *Beijing Review*. January 17-24, 1994.

“高價，高壓。”「文匯報」(1995.1.3).

關文亮. “自相矛盾的美國對華政策。”「文匯報」(1993.8.29).

李鵬. “政府工作報告。”「文匯報」(1994.3.24).

“中美貿易戰能否避免?”「文匯報」(1995.1.9).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爭鳴」(1994.5).

### 3. 기 타

「內外通信」.

「東亞日報」.

「로동신문」.

「朝鮮日報」.

「중앙방송」.

「중앙일보」.

「중앙통신」.

통일원 교육홍보국. 「統一速報」. 1995.12.23

「韓國日報」.

「한겨레신문」.

「鏡報」.

「大公報」.

「法制日報」.

「新報」.

「新華」.

「新華通信」.

「人民日報」.

*Far Easter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w York Times.*

*Time International.*

*Washington Post.*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

---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研究報告書 95-21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

---